

## 상고 이유서

사 건                                      2013다211957                      부당이득금 반환  
원 고, 상고인                      김 명 숙  
피 고, 피상고인                      합 천 군

위 사건에 관하여 상고인은 원심판결이 「민법」, 「소하천 정비법」을 위반하는 등의 중대한 법률해석의 판단유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므로 아래와 같이 상고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 사건 집약

#### 1. 사건 개요

피상고인은 임대차 관계도 없이 미숙한 지식으로 구지적도(갑 제32호 증)상 기술적인 착오가 아닌 경계선을 지적도와 대조 등으로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미리 확인 않은 해태로 소송지에 구거가 있었던 게 아니라 현재의 도로명칭 오광대로의 직선도로 개설로 홍수대비 짧은 배수로를 확보할 목적만으로 성과도상 768-2 군 도로를 두고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이 아닌 눈대중으로 소송지 사유지에 무단 하천을 시설하고 세금까지 징수하여 오고 있습니다(입증 설명서).

#### 가. 무단 점유

무단 갈취로 갑 제7호증 2의 입증자료와 같이 촬영 1986. 7. 13. 시조모의 장례식 사진에서와 같이 자치단체에서 사유지 전(田)에 시멘트와 모래를 제공(1심에서 피고 법정 구두진술 했습니다)하여 이미 끝난 새마을 운동으로 선동

(煽動)하여 1가구 1인 노역으로 주변의 자연석으로 석축을 쌓아 수로를 변경하고, 1989년경 원소유자 시조부의 장례식 날에 장례 준비하는 공유자에게 도로 노역에 나오지 않는다는 다툼이 있었다는 여러 증언이 있었으며, 알 수 없는 년도에 사유지 도로에 콘크리트 포장과 최초 마을 수도공사(2007년 사진)를 하였습니다. 지자체는 당 토지를 2009. 3. 26.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무단 도로포장공사와 2010. 8. 3. 수도보수공사를 을 제11호증에 살펴보시는 바와 같이 절개만 하고는 보수하지 않았는데도 비용은 소송지 포함된 금21,662,000원을 지출도 하는 등의 현재까지 무단점유 사용하여 왔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세금징수도 해 온 사실에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습니다.

#### **나. 소유권의 취득**

위 과정(過程)에서 상고인은 소송지의 前 소유자의 부인인 시숙모의 배추 도매장사 사업실패로 2006년경에 여러 필지의 경매가 진행 되었고, 상고인의 남편이 유년시절 살았던 외가이기에 분리 경매로 소송지와 연접지 가옥만을 3회 유찰로 경락받아 여기저기 돈을 조금씩 빌리는 등 거창법원을 오가면서 2007. 2. 20.에 소송지 경락대금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 하였습니다.

#### **다. 피 상고인의 무단 사용**

피상고인은 경매에 참가하지 않았고, 상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서 갑 제9호증과 같이 하천이 엉망인 곳에 2007년 교각 설치를 하면서 소송지 일부에도 언(축대)을 다시 쌓고 소송지 구거 바닥의 깊이를 현재의 깊이만큼 긁어내는 등, 그 후 수도 보수공사(2007년 전에는 원 수도공사, 2010년은 보수공사)도 하고, 어느 날 가보니 아스팔트 포장도 2009. 3. 26.로 동의나 의사도 묻지 않고 타 동네 공사할 아스팔트 포장 공사 취소(그곳도 반대하였다고 함)로 계획

에도 없었던 소송지에 무단 변경시설을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띄주무르듯 멋대로 자행 하였습니다.

## 2. 소송의 계기

소제기 얼마 전에 남편의 동네 형님이란 분 전화가 와서 “하천공사를 하려고 하니 도장을 찍어 달라”하여 보상이나 하천일대 영망인 지적정리나 하고 하느냐고 하자 그런 거는 모른다고 하여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이후에 “구획정리 없는 공사는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걸고 측량하여 전자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소하천 문서제출명령 신청은 배척당했고 2심에서 다시 문서제출명령 신청하여 받아 보니, 공문서도 누구나 보듯 날조되고 끝까지 “구거”라고 하면서도 “소하천”으로 예산 금207,500,000원 발하고, 그랬으면 **1998년부터 시행된** 「소하천정비법」 제4조(시행규칙은 제2조)에 따라 지정 고시하고서 제11조(시행령은 제10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제15조 3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제12조에 따라 토지 등의 수용도 하고, 제25조에 따라 인근부지 패도 등의 교환 또는 유상 양여를 했으면 비용도 절감되고 또한 용수료가 아니므로 재난 방재를 위한 시설물로 소방방재청에도 비용 보조도 좀 받아 합리적으로 일 처리를 했으면 상고인은 중 된 권리로 자동 보상받고 본 소에 이르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입니다.

---

### 「소하천 정비법」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너무 적음**)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하천부속물을 이전(**구거는 무관함**)하거나 파손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
2. 제10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공사를 한 자 -이하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상고 이유

### 1. 제1점

부당이득금반환금 산정 기산점을 2009. 3. 26.로 본 판단의 잘못이 있습니다.

【적용하지 않은 법률】

- ㉠ 「민사집행법」 제135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위배

#### 가. 항소심 법원의 판단

판결문 4페이지 제2항 4번째 줄부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그 이전부터 피고가 도로를 개설 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 법원의 감정인 김길용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구거, 도로일 경우 2009. 3. 26.부터 2011. 6. 10.까지의 임료는 별지 기재 표와 같이 162,504원이고, 2011. 6. 11.부터의 임료는 매월 6,1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 나. 판단의 부당성

(1) 이에 대하여 상고인은,

피고가 그 이전부터 도로를 개설 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재설(再說) 하건대, 구 지적도 갑 제 32호중에 입증하는 바와 같이 국가에서 생성한 지적도로 종전 구거가 본

토지에 없었음이 명백한 증거를 입증했고,

- (2) 새로운 각도에서 반증 하건대, 판결문에서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원고의 승낙도 없이 지자체에서 도로 아스팔트 포장을 한 2009. 3. 26.로 본 판결과는 달리 피고가 그 이전부터 소송지에 갑 제9호증(2007. 3. 18)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에 아스팔트 포장 이전에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점유하여 왔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과 그 이전에 시멘트와 모래를 제공한 사실과 같은 해 2007년 771-1(전)(갑 제11호증)에 교각 설치 과정에서 소송지 일부도 보수한 사실을 입증 하였습니다.
- (3) 상고인이 거창법원에서 낙찰 받아 소유권을 확보함으로서 소유권 취득하여 피고가 아스팔트 포장한 2009. 3. 26.이 아닌, 원고가 경락대금을 완납한 2007. 2. 20.부터가 민사집행법 제135조에 의거하여 새로운 기산점이 발생 하였기에 감정서 상의 임료산정 시작점으로 보는 감정서의 미불용지 평가가 정확하기에 법리오해 하신 것입니다.
- (4) 또한, 구거·도로로 본 판단의 잘못은 지금까지 원고 측은 기부채납 하지 않았고 피고도 토지수용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 한 톨의 보상을 받은 적 없음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미불용지의 평가) ①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불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 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 (5) 위의 조문에 제①항에는 미불용지는 그 종전의 용지의 이용 상황을 알 수 없다고 한다고 해도 당시의 지목으로 평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

로 제1심 법원의 감정인 김길용의 감정평가서의 미불용지의 감정은 국가 감정원의 기초자료는 없고 감정협회에서 2003년의 평가기준율표(신설)로 0.2%의 아쉬움이 있지만 아주 잘 설명된 결과물이라 원고는 1심에서 현실상 피자 또는 통닭 한 마리 값도 안 되지만 청구취지를 토지 면적 375 m<sup>2</sup>(125평)를 매월 14,370원으로 감액청구 변경을 하였든 것으로 감정평가원의 학자들도 현실감 있게 바꾸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고,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 2009. 3. 26.에 시설한 아스팔트포장공사는 토지주의 승낙이 없이 무단 시설이 되어 적법한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점유의 계속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앞(종전)에 이용하기 지목 전(田)에 따른 감정으로 미불용지는 미불용지로 감정 평가하는 게 현실적이며 타당합니다. 즉,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상정하여 평가란? 등기부 지목이 田이므로 田에다가 피상고측에서 시멘트와 모래를 제공하여 사실상 1986년도부터 석축을 쌓는 등의 무단 점유하여 왔음으로 종전의 공익사업의 지목이 전이면 田이 맞음으로 도로로 감정이 아니라 田으로 감정 평가한 감정서가 맞습니다. “종전”이라는 단어 하나 자체에 해석이 이렇게 다를 수 있어 1986년 공익사업 하기 前,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 지목은 田이며 현재도 田입니다.

#### -용도 법정지목의 28종-

전(田)	답(畓)	임야(林野)	광천지(鑛泉地)
염전(鹽田)	대(垓)	공장용지(工場用地)	학교용지(學校用地)
주차장(停車場)	주유소용지(注油所用地)	창고용지(倉庫用地)	도로(道路)
제방(堤防)	철도용지(鐵道用地)	양어장(養魚場)	하천(河川)
공원(公園)	수도용지(水道用地)	유지(溜地)	구거(溝渠)
유원지(遊園地)	체육공원(體育公園)	종교용지(宗教用地)	사적지(史蹟地)
묘지(墓地)	잡종지(雜種地)	과수원(果樹園)	목장용지(牧場用地)

- (6) 보상 기간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채권의 상환 기한은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하고, 같은 법 제71조(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①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地料), 임대료, 사용방법, 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라고 하므로 공유자와의 관계로 본다고 해도 수많은 판례들(너무 많아 첨부생략)처럼 청구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역산하여 미불용지로 보는 것이 손실보전의 차원이라기보다는 변상금이라는 취지에 합당·산정함이 타당하고 형평성에 맞는다고 봅니다.
- (7) 이번 소하천 공사로 토지수용위원회가 발족을 했다면,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린 남쪽에 있는 잔여지(ㄱ) 42㎡(14평)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잔여지의 판단) ① 법 제1항에 따라 잔여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ㄱ의 토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어 청구되었을 1심 감정신청 시, 38선 분단된 잔여지를 빼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못한 만큼 양입해야 하는 것임을 같이 판단했어야 하는 1심 재판부 판단의 미숙함이 있습니다.

## 2. 제2점

소송지 소하천 정비 취소로 소유의사 포기에 의한 상고인에게 청구취지에 따른 인도하라고 판단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적용하지 않은 법률】

㉠ 「민법」 제211조, 제214조

㉡ 「소하천정비법」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24조의 2, 제26조의 2 등의 위배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의 3 등의 위배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16조 등의 위배

가. 항소심 법원의 판단

판결문 제6페이지 나 항의 6번째 줄부터,

이 사건 토지가 아스콘 포장공사의 이전의 상태로 복구 및 인도될 경우 위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초래됨은 물론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 재해시 구거와 도로의 역할을 할 토지가 없어 주변 농지 등이 침수될 위험이 커지는 점, 이 사건 도로의 포장 부분을 철거하더라도 사실상 도로 등으로 일반 주민들에 의하여 계속 이용될 가능성이 크고 원고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워 이 사건 토지의 원상복구로 원고에게 별다른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토지의 포장철거 등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나. 판단의 부당성

(1) 이에 대하여,

기초단치단체에서는 소송지에 복개천을 한다면서 시행과 취소에 주민들의 조작된 지장을 받고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설계도와 불필요한 안전망까지 설치하는 시방서까지 나온 상태에서 상고인에게 도장만 받았다면



복개천이 현재 사유지 770-1인 소송지에 시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 (2) 그러나, 상고인에게 지금까지의 보상은커녕 공사 착공하기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선 보상 협의(토지 수용 위원회의 재결서가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없어 이의신청(별지 21호 서식)을 할 기회도 없었고, 도장 찍어 달라는 주민 전화만 받았습시다.
- (3) 하루에 한사람 다닐까 말까한 도로를 주민들의 커다란 불편이 초래된다는 판단은 통행량을 조사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원고의 실익이 없다는 375㎡(125평)의 토지를 이용할 가치가 없다는 것은 없어서 못쓰지 개인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민주주의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판단이며, 2012. 7. 10.자 문서제출 명령(1심에서는 배척)으로 제출된 소하천 정비의 예산 금207,500,000원 중에 상고인이 현수막 걸린 상태에서 을 제7호중 소송지 하류 국가하천 하천부지에 법면세골 진입로 보수공사에 지출된 금14,330,000원을 제한 잔액 금193,170,000원을 “한정성의 원칙”없이 타도 포장으로 사용하는 등의 “구거”를 “소하천”으로 예산 측정하는 이유가 뭔지는 물어보지도 않고 공권력남용은 어디가고, 피고 때문에 공유물 분할도 못하는 소유자(공유자 포함)를 객관적인 잣대 없이 직장인겸 가정주부인 일반인이 권리가 있어야 남용을 할 텐데 권리남용으로 굳이 작성을 할 필요가 있었는가 생각합니다. 자구력 방위한 것이고 소하천에 대해서는 1, 2심 모두 일언반구 말씀 없고, 알면서 토지를 취득한 13년이 지난 송전선 철거를 명한 대판 1996. 5. 14, 94다54283과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면 남용이 아니라는 대판 1998. 6. 26, 97다42823과는 배치(背馳)되는 설명이시며, 85다카1383은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이 아니라는 본인의 사건과 유사한 판례입니다.

- (4) 합천군에서 작성되고 예산까지 나온 것으로 조작한 하천 공사승낙과 경로당(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까지 가진 소하천으로 본다면 소하천 정비법에 따라 1986년 이후 몇 십 년 만에 자질구레한 여러 공사를 빼고 대대적으로 하천을 덮을 복개천 공사의 소송지 일대 사업시행을 하면서 제출된 문서를 보아도 측량하고 준비가 된 사업이 “한정성의 원칙”에 따른 시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사고가 나면 사고 이월하여 다음해로 예산을 넘겨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침탈당한 3필지중 원고가 지적도와 실체관계를 부합하는 구획정리 하여야 한다는 현수막을 걸자 바로 남은 잔액(금 193,170,000원)을 타 동네에 도로포장을 해버려 소송지는 더 이상 주민 설명한 복개천사업 부작위로 지역주민의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 주민 불편이 더 크다고 하겠으며, 설계도 까지 나온 이룩된 사업이 앞으로는 어찌할 건지 쉽사리 취소가 되어서는 안 되며, 국민세금은 신중을 기해야 하는 바, 2010년 수도 보수 공사에서는 하지도 않은 공사비용까지 청구(물론 도로 절개를 하긴 했습니다)하여 개인 주머니를 배 불려(도지사 감사신청, 지켜본다는 답변)서는 안 되며, 점심 식사음주(타인 민원)등 하지 말고 올바른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5) 지방자치단체가 지적도가 일제 강점기부터 지형에 따라 도시된 이후, 공유자 차기섭외 총 3필지를 사용승낙의 정당한 권원 없이 세금까지 부담 지우면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소하천 예산까지 편성(문서제출)된 사업시행에 사전 소하천 정비법에 따른 수용위원회 결성도 안했는데 아무리 소송경제의 관점이지만 남을 해한 적 없고 올바른 행정을 기다린 죄 밖에는 없는데 소송비용 4/5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1심에서는 피고의 제출된 문서를 보지 않은 상태로 판결이 된 것이고 원고의 무과실, 소유권을 주장 입증하기 위한 토지 임료 감정 비용, 측량비 등에 지출된 소송비용은

변호인 선임비용 없기에 원인제공자가 부담함이 맞습니다.

- (6) 소하천 정비 사업시행이 적법한지와 지적도 실체관계가 일치하도록 부합하라는 것에 대한 재판부의 심리가 전혀 없었고, 판결문에 언급이 전혀 없음이 너무나 부당하기에 다시 한 번 살펴주십시오. 지금까지 너무 많은 피고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은 창원법원 2012카기2013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으며, 원고의 모든 주장은 민법 교재 기본서에서 거의 발취(拔萃)한 것으로 법률의 기본 원칙에 벗어난 주장은 없었습니다.

#### 다. 인도함이 타당한 이유

- (1) 예산이 발한 사업이 소하천 정비법에 따른 부작위로 상고인 외 주민구제받지 못했고, 증거가 명확한데도 계속적인 상고심에서조차도 “소하천”을 예산이 발해진 사업이 있는데도 “구거”라 하신다면 원고는 부득이하게 소송지의 잔여지 남·북쪽의(ㄱ), (ㄷ)를 (ㄴ), (ㄷ)의 임료 수령거부(?)하고, 「민법」 제229조에 따른 자구책으로 소하천정비 취소로 상실이 언제 될지는 모르기에 지목과는 상관없다(일반인은 60일 내에 지목변경 의무)는 재판장님의 말씀에 따라 자비로 포장을 걷고 폭을 축소, 수류를 변경하여 과반수 지분권자로서 자유롭게 개량,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소심 마지막 변론에서 재판부가 변경되어 심리가 미진했다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

제229조(수류의 변경) ① **구거** 기타 수류지의 소유자는 대안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

②양안의 토지가 수류지소유자의 소유인 때에는 소유자는 수로와 수류의 폭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하류는 자연의 수로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관심을 가지면 원 도로 766-2는 저지대를 축사 주인이 자체 포클레인으로 자발적으로 다져진 곳이라 합천군도 어렵다 한적 없음과 「소하천 정비법」 제12조 포기, 동법 제24조의2관리 부작위, 경험칙에 의하면 잔액으로도 복개시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 (2) 일부라도 재복개 요청 민원을 제기한 답변<sup>1)</sup>에는 지금까지의 복개는 뭐였다는 것인지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잃었고 신중함 없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갈팡질팡하는 행정에 군민만 이래저래 골탕 먹고 세금만 낭비하는 이형태에 국비만 낭비하고 개인에게 배 불리는 합천군, 수도 배관 3.5Ø 매립공사에 포클레인 바가지 크기를 한번 보시면 날림공사의 표본인 비용지출도 낭비하고 업무처리도 엉망이고 행정을 이해할 수 없는데도 질책 없이 구거를 소하천 예산 편성됨이 정당한 것인지를 꼭 알고 싶습니다.
- (3) 하류 하천부지에 시설한 꼬라지([명사] [방언])를 한번 보십시오. 하천바닥에 콘크리트 타설로 물이 빠지지 않아 ❶모기·파리의 온상이고, ❷석축도 이빨이 빠지는 등의 부실공사와 ❸도로도 절개만 한 상태로 오랜 세월 방치 하는 것과 ❹소송지도 일부는 붕괴되고 ❺공익사업의 취소로 소유의 의사가 없음과 ❻인근의 분쟁 해결점을 위해서는 인도함이 마땅합니다. 설령, ❼적법한 임대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635조에 따른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

1) 과거에는 복개천을 했는데 복개천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을안길, 진입로 등에 과거에는 복개공사를 일부 시공하였으나, 집중호우시 재해위험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우리 군에서는 현재 하천복개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09-04 08:36:24 도시디자인과 김용정 답변).

(4) 행정이 신의성실을 위반하고 일관성 없는 것과 오랜 세월 타인의 토지를 세금까지 받으면서 무단 점유하여 긴 세월 사용을 했으면 반환하는 게 맞으며, 그기에 이설이 이행 불능한 것도 아니며, 768-2(도로)에 건축주 축사(주택) 재건축을 도로라는 이유로 불허한 것으로 보아 예전부터 합천군은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긴 안목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원칙 없이 국민세금으로 조사비용, 시간 투자해서 일관성 없이 행정을 펼친다면 너무나 비경제적이라 생각하고, 금고의 문을 연 도둑이 발각되자 문을 닫았다(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만 눌러도 주거침입 2013고단4088)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비용면에서도 어려운 것도 아님으로 수도보수 공사비 착복의 부당과 주민들 모아 사업설명회를 하는 바람에 “너 때문에 복개천 못했다”는 비난 때문이라도 상고인의 추후 허락 없는 공사는 안 되며 갈취의 보복이 아닌 단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자는 게 아니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과 소송지 오폐수 처리, 사정변경이라기 보다는 소유의 의사 없음과 기본과 원칙이 없는 변덕스런 행정으로 인한 침탈당한자들의 구제와 어두운 길이라 초행자나 취객의 낙상이 우려되기도 하기에 요즘은 인근 4대강 사업으로 집중폭우도 예상이 되는 만큼 시방서의 철조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단언컨대,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손해 발생방지 등에 비추어 잔액으로 설계도 보다는 조금 더 큰 폭의 제대로 된 어떤 형태이든 복개천이 필요 합니다. 지자체는 선량한 관리의무가 있음으로 더 이상의 이해관계인들의 피해를 막아야 하며, 토지 주변의 분쟁해소가 필요하기에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법률에 따라 준용하여 소하천정비 취소로 취득포기 하였음으로 또한, 자치단체에서 요즘은 농지취득자격증 발급시 원상복구 계획서를 받는 행위는 본 소와 상충되며, “구거”를 부동산용어에서는 사유지를 통과하는 것은 토지보상을 끝내

고 설치한 것이다. 근거법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다. 라고 하므로 공익사업이 무슨 아이들 장난도 선심공사도 아니므로 민법 제211조, 제214조에 의거 결과물을 제거하고 2014년 시행(국회 계류 중) 예정인 “부동산등기이전특별조치법”에 의한 768-2(도로)의 주택3동의 평온·공연한 것을 점유시효취득을 인정 하실 것이 아니라면 소송지를 인도함이 지당(至當)합니다.

### 3. 결어

① 「민법」 제280조에 의한 계약으로 지상권도 없으면서 여러 차례 매각 요청을 묵살하여 더 이상 소송지의 토지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이제는 피폐하고 자존심이 상하여 하지 않을 것이며, 소하천 사업을 포기를 했는데, 상고인이 소송지를 팔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하천·도로 공사는 어찌할 건지, ② 행정 이 공신력 없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정당화 된다면 준비과정에서 지출된 조사 비용 낭비와 앞으로의 기관의 행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③ 끝까지 “소하천”을 ‘구거’라 하는데 “구거”라면 현 상태로 유지된다고 보시는지, 대토(768-2 도로)가 있다는 점에 심도 있게 신법을 적용하여 판단을 하여 주십시오. 자기 자리를 찾아 가라는 말이며, 미 이행시 빼앗긴 땅을 찾기 위하여 무력행사를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2013년 10월 18일

원고, 상고인 김 명 숙

(날인 또는 서명)

대법원 민사3부 귀중